

데스크 시락



송기동 체육부장

#사이클 윤진규(광주체고 3년)는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전국체전 남고부 경륜에서 10년 만에 광주에 금메달을 선사했다. 하지만 광주에 사이클 실업팀이 없어 결국 타지역 직장 팀으로 진로를 모색해야 했다. 인천 전국체전 69kg 급 용상에서 171kg을 들어올리며 대회신기록을 세웠던 역도 이인우(완도수산고 3년) 역시 완도수산고의 마이스터고 전환에 따라 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인우는 졸업 이후 완도군청 취업선수로 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고사(枯死) 위기 지방체육

*초·중등부터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교체육도 황폐화돼 있다. 체육에 기부하던 기업들도 경제난에 하나 둘 떠나고

은펜칼럼



박홍근 포유건축 대표

송례문이 복원 반년을 조금 넘긴 상태에서 졸속·부실 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단청이 떨어지고, 목재는 갈라지고, 기와·석재·단청안료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국보 1호 송례문은 우리와 후손들의 것이다. 누구의 일기 내에 완공해야 한다든지, 폐쇄적인 문화재기술자들의 복사전이 된다든지, 보여주기 위한 행사비용은 많이 사용하면서 순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미비하다든지, 문제는 있으나 책임질 사람은 없다든지 등 함정으로 이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고



양형일 전 조선대 총장·제17대 국회의원

얼마 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중등교육에 몸담고 있던 친구 부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얘기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쓸 때도 되었지”라고 생각했다. 친구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부인은 가르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교단에서 정년 하는 것을 평소 명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들로부터 “할머니 다음 학기에 또 가르치세요? 할머니 보는 것도 참 괴근하네요. 이제 그만 집에서 편히 쉬세요” 등등의 조소에 시달리다가 결국 명예퇴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몇몇 학생들이 한 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다. 30년 이상을 교단에서 제자들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이로서는 무척 큰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요즘 선생님께 욕설과 폭력까지 행사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 세상이 변하고 또 변한다고 해도 이렇

스쿨존 지그재그 차선 그어 교통사고 경각심 높이자

영국에 갔다가 우연히 목격한 차선 때문에 참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데 곧 깨달았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차선을 교체 봤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횡단보도 전후로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외에 모든 차선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치하여 보행자안전권을 강조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정부가 지방 전문체육 육성 나서라

있다. 유망주들이 올라올 수 있게끔 실업팀(직장팀)이 있어야 하는데 아마져 타지역보다 적다.” 지방체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체육인들은 한국체육의 근간(根幹)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전문체육이 고사(枯死) 위기에 직면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급기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은 최근 긴급모임을 갖고, 대한체육회에 '스포츠 선진화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전달했다. 여기에는 백년대계(百年大計)의 한국스포츠 선진화와 균형있는 지방체육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지방 전문체육 육성경비 국가 지원, 전국체전 운영 개선, 대학체육 활성화 대책 강구, 공공기업의 실업팀 운영 의무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 대표팀 차출 개선 등 16개 요구사항을 담았다.

이 가운데 협의회는 지방 전문체육 육성경비 국가 지원과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대표팀 차출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육 일선현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기대주를 발굴하고, 집중 육성을 하면 중앙에서는 규격화한 국제대회를 앞두고 선수수를 차출해 간 후 대회 결과에 생색낸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 더욱이 감독·코치와

공공건축은 문화자산이다

요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공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인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혹시 그 기관의 장이 주인으로 잘못 이해되는 일들은 없는지 반문해 봐야 한다.

서울시의 일곱년 서울 시청사 건설과정도 별반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영화 “말하는 건축 시티 : 흙”을 보면 신 시청사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정과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엿볼 수 있다. 장소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간과되고, 건축디자인 아이디어와 개념이 존중되지 않았다. 건축가는 건축물의 완공 때까지 전 건축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무시된 채 터진(건설업체가 공사를 설계부터 완공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함)로 업체가 선정됐다. 그 결과 초기 아이디어가 실시설계와 시공과정에서 계속 발전되지 못했고, 구체적인 표현하는데 한계로 나타났다. 그래서 비판이 많다.

친구 부인의 씩씩한 명퇴 소식

게 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이 은혜는 같다는 의미에서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스승의 위치를 임금과 아버지 사이에 놓고 있다. 그만큼 스승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의미한다. 매우 오래된 고전문 플루타르크 영웅전에도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고, 스승으로부터는 그 생명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을 배웠다'는 말이 나온다. 스승의 가르침이 지닌 가치를 매기한 말이다. 요즘 현실은 이런 말들을 민망하게 한다. 선생님의 권위와 명예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선생님의 권위와 명예가 존중되지 않는 풍토에서 교직의 사명감을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면 교육이 그 토대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교육입국'은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교실에는 교단이 있다. 교단의 의미는 칠판이 높다거나 뉘쪽 학생들이 칠판을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진정한 의미는 학생들이 있는 곳과 선생님 서 계신 곳이 같을 수 없다는 뜻에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

선수들이 차출됐을 경우 일년 마무리 농사라 할 수 있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거나 주전들이 빠진 채 참가해 경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대-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이상적이지만, 지역에 해당 실업팀이 없으면 타지역 유출을 막을 수가 없다.

활성화 대책 머리 맞대야

광주·전남 실업팀은 타지역보다 열세다. 광주는 각 구청 등 9개 기관에 12개 종목 실업팀이 있고, 전남은 22개 시·군에 25개 팀이 있다. 반면 대전의 경우 24개 기관, 35개 종목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올해 인천 전국체전에서 성적으로 표출됐다. 지난해 15위를 차지했던 대전시는 실업팀을 창단하고, 우수선수를 영입하며, 전력을 키워 올해 12위로 강종 올라서는 이벤트를 연출했다. 대한체육회가 각 시·도 체육회에 연간 내려주는 비용은 '행정보조비' 명목의 비용 360만 원과 '훈련지원비' 760만 원, '소년체전 출전비' 1억710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대한체육회 전체 예산의 2.6% 정도이다. 시·도체육회 운영비와 지방 전문체육 육성비, 또는 국가대표를 양성하는 실업팀에 대한 정부나

대한체육회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각 시·도체육회가 정관상 대한체육회의 지부로 규정돼 있어 권위주의적인 갑·을관계에 놓여 있고, 지방체육 전문가가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기구(이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현실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20여년이 흘렀다. 지자체 시대에 맞춰 지방 체육정책 역시 각 지자체와 시·도체육회 중심으로 꾸러지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제정에 힘겨운 지자체는 체육예산을 줄이고, 체육에 기부하던 기업들도 경제위기에 흔들리며 손을 떼고 있다. 취업률이 온 신경을 쏟는 대학도 경영 악화로 운동부를 해체하며, 대학체육도 쇠퇴하고 있다. 모두들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운동여건 속에서도 많은 지역선수들은 오늘도 올림픽 등 국제무대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경비를 들여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육성하는 등 지방체육 활성화에 적극 발벗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 전문체육이 살고, 우리나라 스포츠의 백년대계 역시 탄탄해질 것이라 믿는다.

/song@kwangju.co.kr

社說

무등산 탐방객 숫자 ‘고무줄’ 통계라니

국립공원 무등산의 울 탐방객 수가 당초 예측한 1000만 명은커녕, 그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립공원 승격 전에 전망했던 수치가 크게 빗나간 것이다. 그로 인해 탐방객 800만 명 수준에 맞춰 구성한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의 인력 및 예산 등의 축소가 우려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4~10월까지 자체적으로 탐방객 수를 계속한 결과, 구체적인 인원을 파악할 수 없으나 전년 동기 대비 57%대에 머물렀다는 입장이다. 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통계가 광주시에 비해 신뢰를 받는 이유는 계측방식 때문이다. 공원사무소는 지난 7월 9일부터 무등산 내 증심사 지구 6곳, 원효사 지구 6곳 등 총 12곳에 '센서형 계수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녹색순찰대, 사화복무 요원 등을 동원 '인력계수' 작업을 병행, 정확한 탐방객 수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광주시 통계는 주

차전 승용차량, 버스 등에 인원수를 꼽히는 '추정'치로 계산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잘못된 통계는 당장 공원사무소 조직 및 운영에 불통이 될 판이다. 향후 인력과 탐방로 정비, 생태지원 연구 및 보존, 각종 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의 축소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공공통계가 무엇인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는 기초자료가 아닌가. 모든 정책의 신뢰성은 통계에서 나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실하거나 잘못된 통계는 결국 중요사업이나 정책결정의 오류로 이어지는 것이다. 광주시는 탐방객 통계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길 바란다. 문제가 있다면 통계 시스템 자체를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또 반쪽 난 탐방객 통계가 무등산 관리에 결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상가 연일 털리는데 경찰은 대체 뭘하냐

광주에서 하룻밤에 아파트 상가가 연이어 털리는 등 최근 한 달새 이 일대에서 절도사건이 잇따라 가게 입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까지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어 치안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광주시 북구 보촌동 H아파트 옆 상가에 누군가 침입해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한다. 피해를 본 가게는 미용실, 공인중개사사무소, 호프집, 세탁소 등 6곳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많게는 10만 원으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문제는 범인이 가게 뒷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문을 열어 침입한 것으로 확인돼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일대는 한 달 전에도 아파트와 빈집 등이 털리는 등 치안이 극히 취약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조차 잡지 못했는데 형사

팀 1개 반으로 전담반을 꾸리겠다는 방침만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져 입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경찰이 단순 절도사건으로 취급하면서 수사에 소극적이라며 범인의 조기 검거와 CC-TV 설치 등을 호소하고 있다. 북부경찰은 전국 경찰서 중 절도 발생건수가 상위권인데도, 예방은커녕 발생한 사건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민생치안'을 외쳐왔으나 이 모두가 허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본연의 임무인 강력범죄는 물론 민생치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경찰 인력을 범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돼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 일대는 한 달 전에도 아파트와 빈집 등이 털리는 등 치안이 극히 취약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 해결을 위한 단서조차 잡지 못했는데 형사

無 等 鼓

기원 전 399년의 어느 날, 도시국가인 아테네에 아고라의 시민법정, 30세 이상의 자유인으로서 평판이 좋은 남성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된 500명의 배심원은 고발장을 읽어내리는 고발자를 위의 길게 지켜봤다. 피고인의 진술은 변호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인신문도 없이 하루 동안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280명이 무죄, 그리고 220

아테네에서 시작된 배심원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회 모든 분야에 확산 추세에 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지거나 정당에서 공천자를 결정할 때, 그리고 지자체에서 집단위원을 해결할 때 도입되고 있는 배심원제란 또는 시민 배심원제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꼼수팀과 박근혜 대통령

국민배심원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환 시인에 대해 배심원단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시행된 지 5년 된 국민참여재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안시인 사건의 경우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배심원 전원일치의 무죄평결을 배척하고, 일부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번 재판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어느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국민참여 재판에 부처진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培榮 편집국장 奇賢鎭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1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체육부 2200-621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 A X 222-8005) 광 고 미 케 영 국 227-96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문 화 서 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을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이 생각나 반성도 많이 됐다. 우리는 스쿨존 앞에서도 감속은커녕 과속으로 질주할뿐 물론, 아침과 오후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봉사대 어머니들이 수기로 신호를 해도 그마저 무시하며 땀 흘리는 운전자들이 태반이다. 어차피 과속감지기라도 설치할 여력이 없으면 우리도 영국처럼 스쿨존 앞에 이런 지그재그 차선을 그어 볼 것을 권의한다. 영국 현장에서 물어보니 유럽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그재그 차선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로 과속을 막음은 물론 안전사고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스쿨존에서 효과가 크다면 무리란 없다. 과속감지기라도 설치할 여력이 없으면 우리도 영국처럼 스쿨존 앞에 이런 지그재그 차선을 그어 볼 것을 권의한다. 영국 현장에서 물어보니 유럽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그재그 차선이 일반화되어